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2018. 10. 26 구민회

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령 규정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²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¹ 현재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음

² 에너지법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에너지법시행령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③ 생략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생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2.1 제4차 '08~'12 - [별첨1](#) 참고

2.2 제5차 '13~'17 - [별첨2](#) 참고

3. 관련 보고서

3.1 5차 용역 보고서 - [별첨3](#) 참고

3.2 6차 용역 보고서 - [별첨4](#) 참고

3.3 지역에너지계획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 [별첨 5](#) 참고

³ 제11조의2(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 고시 아직 없는 듯)

3.4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실적 평가체계 구축 보고서 - [별첨 6](#) 참고**4. 국가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National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NEEI) 주장**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9월 27일 취임식에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수요 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개별 설비·제품의 효율화, 에너지운영 시스템 최적화를 거쳐 스마트 시티·산단 등 공간의 에너지소비 구조를 혁신하는 국가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함.
-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10월 2일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에너지수요측면에서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산업을 혁신해 에너지저소비산업으로 전환토록 수요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전력의 40%를 소비하는 전동기 효율을 높이고, 다른 개별 설비나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며, ‘우리 사회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소비를 감축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함. 이와 함께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수단을 활용해 스마트가전과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일반 가정과 공장에서도 널리 보급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겠다’고 함. 아울러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 등과 같은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이같은 국가 비전을 담은 국가 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를 조만간 마련’하기로 함.
- 성 장관은 또 10월 5일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 ‘국내적으로 ‘에너지 이용 문화 개선 → 관련 투자 확대 →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를 목표로, 경제 전반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신산업 창출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함.

5. 국가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NEEI)

5.1 예상 법적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시행령 제15조

- 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⁴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5.2 검토

- '국가 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national energy efficiency initiative'⁵ 혹은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NEEAP)⁶'는 새로운 개념은 아님.
- 산업부로부터 합기본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예경연 소진영 박사에 의하면, 11월 중 계획되어 있던 합기본 용역 기한이 연기되었는데, 그 이유는 중기계획인 '국가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나서 합기본을 작성 및 공표할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함.

6. 제6차 `18~`22 합기본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제4차, 5차의 합기본에 대한 평가

⁴ 이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음. [별첨7](#) 참고.

⁵ 구글에서 national energy efficiency initiative를 검색하면 호주의 건물 규정 위원회에서 만든 efficiency initiative 또는 saving initiative가 가장 관련 있는 자료로 검색됨.

⁶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s (NEEAPs) set out estimated energy consumption, planned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the improvements individual EU countries expect to achieve. Under the Energy Efficiency Directive, EU countries must draw up these plans every three years.

EU countries must report the progress achieved towards their national energy efficiency targets on an annual basis.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energy-efficiency/energy-efficiency-directive/national-energy-efficiency-action-plans>

- 이행되었더라면 줄어들었을 에너지소비량(그리고 달성하였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 이행되지 못한 또는 이행하지 않은 이유
-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점
 - ◆ 정부
 - ◆ 한국에너지공단
 - ◆ 지방자치단체
 - ◆ 기업
 - ◆ 수송, 상업, 가정, 공공기관
- 제 값이 매겨진,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분명한 에너지 가격 정책의 도입 방안
-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통계/데이터 확보 방안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 고려
 -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방안과 가능한 일치할 수 있도록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독립된 에너지효율 규제의 필요성 인식
 - 현재의 에너지 효율 수준이나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볼 때,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가 되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바로 벗어나는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배출권이 초과할당 되지 않도록, 무상할당량이 줄어들도록, 배출권 할당시 제대로 된 벤치마크가 되고, 감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 - 환경부
 -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 환경부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규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강화
 - ◆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의무 부과
 - ◆ 사업장내 전년 대비 원단위 개선 의무 부과
 - ◆ 에너지관리지도를 에너지효율화이행지도로 개정
 - 새로운 제도도 좋지만 과거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도중에 좌초한 규제들 재검토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 개정 및 활용
 - ◆ 자발적 협약의 부활 검토
 - ◆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을 엄격히(발전 제외), 세액공제 효과 사후 측정과 공제액에 에너지효율화 정도를 반영, 최저한세 대상 제외 등
- 새로운 제도도 좋지만 과거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도중에 좌초한 인센티브들 재검토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R&D
 - R&D를 위한 R&D인지 아니면 장/중/단기의 성과가 평가되는 R&D인지
 - 특정 주제 자체를 정해서 내려 주는 현 행태에 대해 원점 재검토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실효적 수립과 이행
-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이행 담보 방안 – 합리화법 제6조에 적힌 대로 '에너지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녹색위 활동만큼은 해야!)
 - 매년 목표치가 분명한 이행 계획 수립
 - 목표 달성 여부의 검토
 - 목표 달성 못했을 때의 명확한 수정, 비판과 재도전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변화
 - 기후에너지부 신설(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 독립, 환경부의 온실가스 정책기능 흡수)
 - 에너지효율청의 설립 고려, 안되면 최소한 에너지효율국으로 승격
 - 수요관리과의 명칭을 '에너지효율(증진)과'로 변경
 - 한국에너지공단의 역할의 확대 개편
 -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효율을 위한 분명한 역할 부여와 이를 위한 지원
 - 에너지효율 정책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을 맡는 것이 맞는지 검토
- 에너지효율화를 하면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점 강조
- ESCO 산업에 대한 대책
- 일본, 미국, EU의 우수 제도 적극 도입